

# “돈 마른 지방, 중앙정부에 끌려 다닌다”

현 정부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 추진은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을 더욱 궁지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가 얼얼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폐지 명분=정부는 중복된 목적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농특세와 교육세의 본세 흡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목적세의 남발은 재정 지출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등 조세 원칙에 맞지 않기에 조세체계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무원 인력의 감축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지방 피폐화 심화=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할 경우 우선 지난해 3조3천억여원, 올 3조7천억여원에 달하는 농특세 재원이 없어진다. 이를 정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에서 농식품부 위상이나 산업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농특세는 세수가 매년 평균 14.7%로 증가하고 있는 세급이다.

때문에 해가 갈수록 실질적인 감소폭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농식품부가 강력히 폐지를 반대했다.

더욱이 농도인 전남의 경우 올 기준으로 1조3천억여원 정도의 농특세 재원을 받지 못할

## ■ 교육·농특세 폐지 추진 ...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 일반회계서 보충한다지만 안정적 지원 난망

### 예산권 가진 정부 전횡편 자치권 훼손 심각

예상이다. 전남도의 농어촌 예산이 전체 농어촌 예산의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수치다.

이 정부 들어 예산 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 전남도는 향후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에도 교육세를 통해 매년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사라진다. 정부는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교부금 증가(3조5천억여원)로 일부 상쇄하고 나머지 부족분 6천억원은 현행 20%인 교부율을 인상해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확보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침체가 예상돼 교육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 예산 1조3천358

억 원 중 80.8%인 1조798억 원, 전남도교육청은 2조5천612억 원 중 87.3%인 2조2천367억 원이 각각 교육세에 의한 교부금이다.

▷중앙정부 지방 예산 축소=두 목적세가 폐지되고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 지방의 중앙 예산축소는 심화된다.

예산권을 가진 정부가 전횡을 할 경우 지방정부·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에 무조건적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치권이 심각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현재 농특세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 법사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세)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기 위해 교육세폐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현재 6개 지방세목에 부가돼 있는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

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10년 1월 교육세는 폐지된다.

일단 농특세 폐지법안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발로 11일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에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논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한 고비를 넘긴 듯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혁을 명분으로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돼 있던 감세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노당 의원들은 감세법안과 농특세 폐지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는 법사위원장의 말에 점거 농성을 풀었다. /연합뉴스

## “지방대책, 수도권 완화 위한 미봉책 안돼”

###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인 지방발전종합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적 형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은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방도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수도권 완화정책이나 ‘5+2 광역경제권 정책’,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각종 정책들은 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본부는 “5+2 광역경제권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차별받았던 지역의 불균형이 고착될 것이 고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로 인해 지방재정은 붕괴될 처지에 놓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경제, 재정, 교육, 문화 등 대부분 분야에서 붕괴상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21세기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고 상생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의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도 농기계 구입 지원액 20억 증액

### 강성종 도의원 “총 28억6천만 원”

전남도의 내년도 농정예산에서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이 당초 8억6천만 원에서 28억6천만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제 의원)에서 강성종(민주·신안2) 의원은 최근 농산물 가격 폭락과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농기계 공급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전남도에 최소한 도비 20억 원 이상을 증액

해 주도록 요청했다.

강 의원은 “맞춤형 농기계 구입 도비 지원액이 20억 원 증액되면 전체 사업비가 당초 43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증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일반 농가 등 3천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 공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박재영 행정부지사는 답변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 농기계 구입지원 예산 20억 원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에 김치 연구기관 들어선다

### 이정현 의원 “예산 30억 확보”

연구·홍보·마케팅·체험 기능을 두루 갖춘 김치연구기관이 광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치연구기관 설립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기관이 들어설 장소로 광주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기관은 김치의 연구·홍보는 물론 판매와 체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센터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된다.

또 국비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세계 최고의 김치허브기관으로 만들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6월께 기본설계에 들어가 3년 내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치허브기관이 설립되면 광주 김치축제와 함께 광주가 음식문화의 선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타지역에서도 김치연구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광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광주에 김치축제가 자리를 잡았고 남도의 음식문화가 국내에서 으뜸인 만큼 광주에 김치연구기관이 들어서는데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버지의 비밀통장

물렸습니까?

가만 통장을 들여다보며  
흐릿하게 미소 지으셨던 까닭을,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여유를—  
지금껏 가족을 위해 일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한 일은 단 하나,  
고백조차 국민연금을 낸 것뿐—  
20년을 꾸준히 내고 받으시는 노후엔 국민연금은

아버지 단상을 위해서 쓰여도

“든든한 노후, 국민연금이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국민연금 2008년 중 평균수익률 10.2% (기준금리 4.0%, 2008년 9월 말 현재)  
▶ 노후에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매년 정기인상률 반영하여 지급